



文 대통령 향한 환영과 무덤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고 자리에 일어나 있다.

유승민 “대통령, 국민의 경제 고통 못 느껴...오기뿐만 연설”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오늘도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기뿐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표는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없다.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이라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 모두가 국민이 살아야 할 빛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뉴스1

대안신당, 내달 17일 창당

“12월 초 패스트트랙 일괄처리”

민주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내달 17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7일 오후 2시의 원외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창준위)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연내 창당 완료 목표”라고 밝혔다.

트랙(신속처리안건) 당론으로 ‘12월 초 일괄 상정’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많이 요동치고 있다”며 “(신당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단 창준위를 띄워 기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공조로 상정한 패스트트랙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당시 ‘선(先) 선거법 처리, 후(後) 사법개혁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조국 사태 이후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대안신당의 창당 로드맵은 지난 8월 민주당을 탈당한 지 2개월 만에 나왔다. 당초 10월29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장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선에 따라 12월 초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창당 시점으로는 중양선거관리위원회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11월15일 이전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로 현행 지역구 문제가 수정의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대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독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창준위 발족 시점을 그 이후로 잡은 이유와 관련해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관련법 역시 합의 정선에 따라 합의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안신당은 패스트

‘野야유’ 에도 공수처 연설한 文대통령

국회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자유한국당측, ‘조국’ 외치며 웃기도

文대통령, 연설 후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원들로부터 총 26번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해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초반 10분 가량 여당 측 박수를 받으며 무난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이때까지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수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연설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연설대 앞으로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윤호중, 박경미, 유은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측 인사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재정 여력’ ‘평화’ ‘포용’ ‘더 높은 삶의 질’ 등의 단어를 더 힘주어 발음하며 강조했다. 또 ‘혁신의 힘’ ‘포용의 힘’ 등을 말할 땐 한국당 측에 호소하는 듯 양손을 움직이며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엄숙한 표정으로 여야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로 약 33분 가량 진행됐으며 의

단만 문 대통령이 고용 현황과 관련해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측 의원들이

일제히 ‘에이’ ‘우우’ 등의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5초 가량 박수를 내며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은 문 대통령 공수처 발언에서 정점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야유를 이어갔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이 언급될 때엔 손으로 ‘X’를 만들며 “안 돼요” “야당 무시하지 마세요” 등을 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군 관련 발언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말한 데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야유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반대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답답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연설 끝까지 야당쪽을 주로 바라보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는 ‘공정 사회’ 부분에서 더 거세졌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자,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입시 특혜를 비판하는 듯 ‘조국’을 외치며 비웃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모두 마친 후 그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과 악수를 나눴고, 이후 미소를 지은 채 홍일표 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측 의원 10여명과 일일이 인사를 전했다. 다만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종료 직후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그만하세요” 등 반박 주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여당 측 인사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호를 받기도 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